

포스트 김정일 시대 전망과 국민의 자세

김태우 (통일연구원 원장)

Online Series CO 12-02

37년간 북한을 철권 통치해온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생물학적 수명을 가진 인간이었던 모양이다. 김 위원장은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2011년 12월 17일 사망했고, 북한 당국은 이를 후인 12월 19일 이 사실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의 별세로 북한은 재빠르게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고 김정은 체제의 제도화와 정당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정은 후계자와 후견세력으로 대변되는 북한의 신지도부는 12월 28일 장례식과 29일 추도식에 이어 31일에는 김정은을 최고사령관에 추대하는 등 '권력공백 메우기'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전면적 방북조문을 허락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것과 변화를 요구하는 내외의 시선을 차단하는 것에도 빠른 행보를 보였다. 신지도부는 12월 30일에는 국방위원회 명의로 "이명박 정부와는 영원히 상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변화도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서 2012년 1월 1일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을 통해서도 '민족의 대국상을 외면하고 조의표시를 방해한 남조선 역적패당의 반인륜적, 반민족적 행위'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북한 신지도부 구성과 특징

남한의 분석가들에게 있어 12월 28일 치러진 장례식은 신지도부의 구성과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첫 계기였다. 이날 김정은을 포함한

8명의 지도자들이 김 위원장의 시신을 운구한 영구차를 호위했는데, 김정은의 바로 뒤에는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치했다. 이는 제2인자로서의 장성택의 서열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외에도 리영호(인민군 총참모장, 정치국 상무위원),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정치국 위원), 우동측(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국방위원), 김기남(당 선전비서, 정치국 위원),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당 교육과학 비서) 등이 영구차를 호위했다. 영구차를 호위하지 않았지만 김경희(인민군 대장겸 정치국 위원), 리명수(인민보안부장), 김경옥(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영림(내각 총리) 등도 김정은 세력의 핵심들이다.

드러난 핵심세력들의 면면을 종합하면, 신지도부가 선군정치 유지와 체제수호를 목표로 내걸고 당을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핵심세력의 대부분은 군장성들이다. 이들 중 민간인은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았지만 군인으로 볼 수 없는 김경희와 장성택 그리고 최영림 정도가 전부이다.

핵심인사들이 맡을 역할도 비교적 분명하다. 김경희-장성택 부부가 당을 추스르는 중심인물이라면, 리영호와 김영춘은 군을 장악하는 인물들이며, 김정각, 우동측, 리명수, 김경옥 등은 체제를 단속하는 역할을 담당할 인사들이다. 김정각이 제1부국장을 맡고 있는 인민군 총정치국은 군장교들을 감시하는 기구이고, 우동측이 실질적 지도자인 안전보위부는 중앙정보기관으로 반체제 민간인들을 색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경옥이 제1부부장으로 있는 당 조직지도부는 당군정 간부들을 감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기남은 김정은 우상화를 포함한 정당화 임무에 그리고 최태복은 김정은 후계자의 외교 및 과학정책의 멘토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장성택, 김영춘, 우동측 등이 북한 헌법상 최고기구인 국방위원회의 부위원장 또는 위원을 겸하고 있어, 신지도부의 핵심세력이 국방위원회도 장악하고 있음은 당연하나, 핵심세력의 대부분이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속하고 있다는 점과 김정일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이 가졌던 주석직을 차지하지 않았듯 김정은 역시 아버지 김정일이 차지했던 국방위원장직을 비워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지도부가 당을 통한 통치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중앙군사위에는 부위원장인 김정은을 포함하여 리영호, 김영춘, 김정각, 우동측, 김경옥 등이 망라되어 있다. 김정은 본인도 2010년 9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을 통해 공식 후계자가 되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경희-장성택의 역할과 서열이다. 이들은 김정은 후계자의 고모와 고모부로서 해임되지 않는 불변의 친인척이며, 장성택은 형제와 삼촌이 모두 군장성출신인데다 사실상 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를 통제하고 있어 여타 인물들과 병렬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김경희-장성택은 핵심세력 중의 핵심이며, 때문에 김정은 후계자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과 김정은에게 아직 정교한 국정수행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신지도부는 김경희-장성택을 중심으로 하는 조연자들이 김정은을 둘러싸고 있는 '집단조연체제' 또는 '집단섭정체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신지도부의 안정성 전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례절차가 끝나면서 한국은 물론 세계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신지도부의 안정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탈하게 안착할 것인가, 아니면 지도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올 것인가. 변화가 온다면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이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일단 단기적인 전망과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

일단 추모기간 동안에는 김정은의 신지도부가 비교적 무탈하게 김정은 체제의 제도화와 정당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대부분의 한국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단기전망이다. 추모기간이 얼마나 갈지 확인할 수 없으나, 대개 '강성대국 원년' 행사의 절정인 2012년 4월 15일 태양절(고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까지로 보면 무난할 것이다. 예상하지 않은 시점에 권력을 승계한 신지도부로서는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클 것이기 때문에 '체제의 지속성과 안정성(continuity and stability)'을 최우선 시급과제로 간주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북한전역에서는 평양정부가 주도하는 추모경쟁이 지속될 것이며, 불만세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추모 분위기에 압도될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당 총비서 추대도 서두를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노장청(老長靑) 조화를 염두에 두면서 당군정의 요직에 측근들을 배치하는 세대교체 작업도 가속화될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정당화를 위해서는 우상화와 업적 쌓기가 진행될 것이다. 장례기간 중에 이미 김정은에 대해 '영도자,' '공화국 영웅' 등의 호칭이 사용된 것이나 김정은이 우표에 등장한 것은 신지도부가 정당화를 재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씨 왕족'에 대한 정리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주도할 인물은 김경희-장성택 부부일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이복동생인 김평일 주 폴란드 대사,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 그리고 친형인 김정철 등을 지지했던 세력을 평정 또는 숙청하는 일은 이미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네 명의 부인을 두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생모 고영희 이외의 가계에 대한 정리 작업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사람으로 분류된 빨치산 2세대 인사들의 요직 배치도 병행될 것이다.

추모기간 동안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은 일단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이 갑자기 사라진 현재의 북한은 상처 입은 맹수가 위기를 느끼고 잔뜩 웅크린 상태와 유사하여 상대의 대응을 유발할만한 대형 무력도발을 생각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12월 30일 "이명박 정부와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국방위원회 명의의 비난 성명에는 이명박 정부와의 기선잡기 싸움, 2012년도 남한선거 개입 의지, 국제사회와 한국으로부터의 개혁개방 압박 차단 등의 복합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의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수세적 허세(defensive bluffing)'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모기간이 끝나면 다양한 불안정 요인과 안정 요인들이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관한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이론적으로는 김정은 체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김일성 조선'의 제3대 군주로 안착할 가능성, 집단조언체제가 지속될 가능성, 권력투쟁이 가시화될 가능성, 권력투쟁을 봉합하는 본격적인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가능성, 평양과 지방간의 대립

이 조장될 가능성, 현상유지 세력과 개혁개방 세력 간의 힘겨루기가 부상할 가능성, 군부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 소요사태로 인한 혼란이 조성될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어떤 시나리오로 귀결되는가 하는 것은 결국 불안정 요인과 안정 요인들 간의 역학관계에 달려있다.

우선, 불안정 요인으로는 김정은 개인의 역량 부족, 경제난, 식량난 세대의 존재, 이상화 실패 가능성, 평양과 여타지역 간의 차별, 유훈통치 효력의 희석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김정은 후계자는 약관 29세의 나이에 후계수업 기간도 3년 미만으로, 통상 독재자의 후계자가 권력기반을 굳히는데 필요한 3P(political power base, policy capability, personality)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강성대국 원년 행사를 치러야 하고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989년 북한이 '평양 대축제'에 20억 달러를 쓰고 난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맞기 시작했던 전례에서 보듯, 강성대국 행사에서 재원을 고갈하고 난 후인 2012년 후반에 북한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북한의 경제는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를 의미하는 내각경제, 시장경제, 그리고 국방비와 당경비를 감당하는 수령경제 등으로 구분된다. 내각경제는 파탄 상태이며 수령경제는 복잡하고 부패에 취약하다. 식량난 세대란 1990년대 중반 이후 평양이외 지역에 대한 배급제가 중단되면서 굶주림 속에 방치되었던 주민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정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축적한 부를 2009년 화폐개혁으로 빼앗긴 사람들 역시 중앙정부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평양에 '아파트 10만 가구 건설'을 추진하면서 지방의 물자들이 평양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도 지방주민의 차별 의식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김정은이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역량을 발휘할 것인지는 두고 볼 문제이다.

안정 요인으로는 김정은이 '혁명혈통'을 이어받은 적자라는 점, 최강의 후견국인 중국이 김정은 체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 점, 김정일 위원장이 생전에 권력승계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인사들을 상당부분 제거했다는 점, 오랫동안의 폭압정치로 인해 군부나 주민사이에 중앙정부에 저항할 조직이나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군부와 기득권층이 김정은과 공생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중에서도 군부와 기득권층의 지지는 결정적이다. 이들은 김정일 위원장을 '불세출의 영도자이자 자애로운 아버지'로 받들면서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로서, 이들에게 있어 특권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김정은을 정점에 세우고 체제와 조직은 지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안정 요인들이 불안정 요인들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김정은 체제가 안착할 것으로 보는 전망에 더 많은 설득력이 실리고 있음이 사실이다.

신지도부의 정책기조 전망

김정은 중심의 신지도부가 기반 굳히기에 성공한다고 가정할 때, 이들이 택할 대외정책 기조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 크게 보면, 북한의 신지도부에게는 두 개의 선택이 있다. 하나는 핵무기를 내려놓고 개혁개방을 수용하는 '좋은' 선택이며, 다른 하나는 전임자가 그랬듯 체제존속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는 선택, 즉 핵을 앞세운 선군정치와 폭압정치를 이어가는 '나쁜' 선택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로서 북한이 좋은 선택으로 갈 것이라는 징후는 별로 없다.

개혁개방의 수용 여부는 주로 두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첫째, 내부변수를 보면 아직

은 개혁개방을 전망할 만한 동향은 보이지 않는다. 군부와 특권층은 개혁개방으로 인해 가장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현상유지' 세력이라 김정은 체제의 핵심 지지기반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2월 29일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김영남이 읽은 추도사에서는 '선군'이라는 단어를 22회나 언급되었고, 30일 국방위원회 성명에서도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었다. 이들 '현상유지 세력'에게 있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선을 그 어떤 원수도 건드리지 못하는 핵보유 강국으로 변신시킨 천출명장'이었으며, 핵무기는 김정일이 남긴 최대의 유산이다. 때문에, 신지도부가 느끼는 체제불안이 높아질수록 핵무기에 더욱 집착하면서 2012년 중 3차 핵실험으로 대내 및 대외에 기선을 제압하려 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두 번째는 외부변수로서 중국의 영향력이 결정적이다. 하지만, 이 부분도 비관적이다. 중국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 굵직한 사태들을 야기하는 가운데서도 지난 2년간 오히려 북중 동맹을 강화시키는데 전념하다시피 했다. 이 기간 중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2009.10), 귀보송(郭白雄) 당 중앙군사위원의 방북(2010.10.23), 량광리에(梁光烈) 국방장관의 방북(2009.11.22), 김정일 위원장의 연이은 방중(2010.5, 2010.8, 2011.5), 중국 함정의 원산항 예방(2011.8) 등이 이어졌고,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은 "1950년 한국전쟁은 북침전쟁"이라는 도발적인 발언을 했다(2010.10). 이 기간 동안 북중 교역은 두 배로 늘어났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직후에도 중국은 최고위 지도부 전원이 북경주재 북한 대사관을 방문하여 조문을 했고, 12월 31일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에 추대되기가 무섭게 중국은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방조하고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두둔하면서까지 북중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강도를 실어 북한에게 개혁개방을 압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물론,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구하는 변수들도 있다. 혹자들은 주민의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혁개방을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 김정은이 스위스에 유학한 컴퓨터 세대라는 점을 들어 개방적 성향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는 분석가들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수들은 구조적·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쉽게 압도될 것이다. 북한은 주민이 정부를 선택하거나 정부정책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사실상의 '왕정국가'이기 때문에 평양정부가 체제불안을 초래하면서까지 개혁개방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김정은이 개방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신지도부의 핵심세력들이 가진 강력한 체제수호적 성향에 의해 압도될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김정은 후견그룹의 특징, 중국의 행보, 장례기간을 통해 표출된 신지도부의 발언 등을 종합할 때, 북한의 신지도부는 일단 '개혁개방'보다는 '체제수호'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전략적으로는 중국과의 전통적 동맹관계를 중시하면서 전술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정치적 지지와 경제협력을 얻으면서 체제와 핵보유를 고수하려 할 것이며, 미국으로부터는 6자회담 재개 등을 통해 당장 필요한 경제지원을 받으면서 핵문제와 관련한 비판을 희석시키려 할 것이다.

'체제수호'를 바탕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김정은 체제를 굳혀나가겠다는 신지도부의 의지는 2012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도 드러나 있다. 1월 1일 발표한 신년사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푸는 것은 강성국가건설의 초미의 문제"라고 인정하면서, 농업혁명, 기초공업, 전력생산, 철도수송 능력, 비료생산 등 민생경제 활동을 강화할 것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2011년도 신년사에서 19회나 사용했던 '강성대국'이라는 표현이 5회로 줄고 '강성국가,' '강성부흥'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현실을 인정하고 표현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인민군대는 선군혁명의 기둥, 주력군이며 강성국가건설의 돌격대'라는 표현과 함께 "전군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평양시의 면모를 일신하는 것은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을 성대히 맞이하기 위한 사업이자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이기 때문"이라는 설명과 함께 청년동맹조직, 여맹조직 등 근로단체들의 솔선수범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체제 다지기에 다급한 신지도부가 군을 위시한 주요 국가조직들의 충성심을 확인하고 체제불안 요인들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신지도부가 변화거부 세력으로 구성된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며, 그들이 변화 거부를 천명한다고 해서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 북한의 '좋은 선택'을 선도해야 하는 우리의 노력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돌연한 퇴장으로 어떠한 의미에서든 북한이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미리 도랑을 파서 원하는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한국에게 남겨진 과제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퇴장은 남북한에게 약(boon)이 될 수도 있고 독(bane)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때에 한국 정부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 북한의 변화 유도, 국가안보, 통일, 남남갈등 극복 등 대북정책이 가져야 하는 다양한 장단기 목표 모두를 포괄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과제들 간에는 상충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목표에만 치중해서는 안 되며, 목표들 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 역시 한국정부가 발휘해야 할 능력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한국정부에게 부과된 당장의 과제이다. 그 동안 이명박 정부는 '원칙있는 대북'의 기치 아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과시, 체복 또는 방북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 남북거래에 있어서의 국제적 절차 준수, 대북지원의 투명성 제고,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 등을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도발의 최종 책임자였던 김정일 위원장이 사라진 마당인데다 북한 역시 기로를 맞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도 북한의 신지도부가 쏟아내는 험구(險口)에 개의치 않고 더 많은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정부간 관계개선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성의로 화답한다면, 남북교류나 대북지원에 비대칭적 관용과 포용을 발휘하는 것이 한국의 당연한 다음 수순이다.

같은 맥락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도 일단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볼만하다.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해 정부는 합동조사, 천안함-연평도 사과, 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등을 요구해왔으나, 이제는 신변안전 보장 이외의 요구조건을 철회하고 재협상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6자회담에 대해서도 가벼운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북한 신지도부가

여전히 핵무기를 체제수호의 궁극수단으로 간주하는 한, 북핵의 완전한 해결은 북한체제의 변화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즉, 어차피 6자회담은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장치가 아니다. 그렇다면, "6자회담은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유연한 자세로 회담재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회담 재개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이 복귀하고 농축활동이 중단된다면 없는 것보다는 좋은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북한의 변화라는 더 중요한 목표를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 핵, 인권, 궁핍 등 모든 북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북한의 변화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자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중시하고 주민의 인권과 재민주권 원칙을 존중하는 나라로 변모한다면, 핵문제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며 무력도발도 잦아들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민의 궁핍과 고통을 가속화시키는 핵무기를 내려놓게 된다. 북한 달래기를 통한 일시적 평화가 아닌 상호존중과 상호호혜에 입각한 항구적인 평화는 이러한 변화 위에서만 가능하다.

아울러, 북한의 변화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평화통일의 토대가 된다. 어떤 경우든 한국의 통일목표는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에 이은 합의적 평화통일이며 북한붕괴를 통한 흡수통일은 목표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이를 위해 한국이 추구하는 북한의 변화란 북한 지배층이 안전하게 적응해나갈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공간적 여유를 열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북한이 변화를 거부하고 반인권적 체제를 고수하는 한 이런 통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정일 사망으로 인한 북한의 권력공백은 안보 측면에서도 새로운 과제들을 부여하고 있다. 다수 전문가들의 '김정은 체제 안착' 전망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북한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불확실하다. 당장 불안정 요인이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향후 불안정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북한이 내부적 체제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긴장을 조성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한국의 의도와 무관하게 내폭(implosion)으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안보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며, 이것이 이 시점에 굳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이다. 확고한 안보태세란 전쟁을 원해서가 아니라 상호간 무력충돌을 배제함으로써 항구적인 남북협력과 통일을 위한 기반을 닦고자 하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중국이 보여준 행보는 한국에게 진실로 심각한 외교과제를 안겨주었다. 이는 중국이 북한 체제가 빚어내는 비인권적 현상이나 대남 무력도발, 핵실험 등과는 무관하게 북한을 '사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로써 한국과 중국이 연간 교역량 2,500억 달러에 700만 명의 인적교류가 이루어지는 막중한 경제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정치군사 관계는 이와는 동떨어져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중국의 이해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엄청난 대중 통일외교 과제를 안겨준 것이기도 하다. 한중관계는 활발한 경제교류와 인적교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차원의 미-중관계의 전략환경 변화와 북한이라는 지역변수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중장기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예상되는 북한의 한국선거 개입과 남남갈등 조장을 극복하는 문제도 간단하지 않다. 북한과 관련한 모든 중요한 사안을 놓고 벌어지는 남남갈등은 한국의 대북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집권당

이 바뀌는 동안에도 일관된 기초의 동방정책을 펼쳤던 서독과는 달리,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국에 서의 갈등은 '우리 내부의 이견' 차원을 넘어선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중시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며, 정치개입 동기는 더욱 강해진다. 서로에게 '전쟁세력' 또는 '중북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벌어지는 한국의 남남갈등 하에서, "긴장이 보수세력을 결집시키므로 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도발이 없다"는 논리도 이미 고전이 되었다. 지금은 핵무기를 위시한 비대칭 위협을 앞세운 북한의 도발이 두려움을 유발하여 남한의 선거민심을 북한이 원하는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북과 남 그리고 해외의 온 민족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기치 밑에 단결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한 부분은 남한의 정치에 개입하여 남남갈등을 조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의지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기에 어떤 형태로 표출될지 예견하기는 어렵다.

이렇듯 김정일 사망이 던져주는 과제와 목표는 다양하지만, 이에 더하여 목표 간의 상충성을 조절하는 문제는 언제나 까다로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 체제변화를 요구하면 평양정부가 반발하여 정부간 관계가 악화되고 긴장도 높아진다. 반대로, 정부간 관계개선을 위해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대북지원의 투명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지 못하게 된다. 즉, 북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통일을 포기하고 '평화적 분단관리'에만 매달리는 정책이 되고 만다. 한국에게 있어 한미동맹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중국과의 비적대적 우호친선 관계도 심화시켜나간다는 '연미통중(聯美通中)'은 생존과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숙명적 과제이지만, 미국과 중국이 날카롭게 대결하는 상황에서 이 과제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 '균형과 조화'란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힘든 과제이다.

국민의 자세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직후 며칠 동안 한국의 방송매체들이 향후 전망과 대응에 관한 많은 양의 담론을 생산했다. 이 기간 동안 일단의 정치학자들은 거의 모든 매체에 출연하여 특정한 방향의 담론을 쏟아냈다. 이들은 공히 김정은 체제의 안착을 전제하면서 한결같이 "지금까지의 남북경색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 때문이므로 유화적인 대북정책으로 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간 관계개선을 통한 평화적 분단관리'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국민의 사고를 '단순(單純)화단견(短見)화'시키는 무책임한 논리이다.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시대의 개막'이라는 현 상황은 분명 '정부간 관계회복'만을 고민하면 될 정도의 단순한 국면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은 북한의 민주화, 인권개선, 한국의 안보, 통일, 한중관계 등 김정일 사망이후 남겨진 숱한 과제들을 외면하는 것이다. 북한이 저질러온 만행들에 면죄부를 주면서 내 정부만을 탓하는 것은 미래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자학(自虐) 논리이기도 하다. 이런 주장은 폭압정치에 시달려온 북한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며, 통일을 고대하는 실랑민과 탈북자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한다. 이들의 희망대로 국민의 생각이 "북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어 관계를 개선하고 긴장을 조절하면 되는 것"으로 단순화된다면, 향후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소멸될 것이며, 한국 국민은 불확실 사태와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는 단견적 국민으로 전략하게

될 것이다.

'김정일 없는 북한'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한국 국민은 안목과 지혜를 가져야 한다. 국민은 대북정책이 추구해야 할 다양한 목표들을 모두 의식하는 넓은 안목을 가져야 하며, 남북관계 개선이란 많은 목표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북한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유력한 시나리오는 있지만 확실한 시나리오는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1991년 당시 미국에는 수천 명의 소련 전문가들이 있었지만, 소련연방의 와해를 정확하게 예견한 사람은 없었다. 현명한 국민이라면 한줌의 지식을 토대로 예언을 강요받는 정치학자들의 말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원칙을 더 중시해야 한다. 현명한 국민이라면 목표들이 서로 상충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고, 시기와 여건에 따라 정부가 앞세우는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할 것이다. 이런 국민은 정부가 표현하지 않는 목표들에 대해서도 행간을 읽어내는 안목으로 공명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가 유연성 발휘를 위해 피문은 손들과 악수하는 것도 의연하게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혹자들은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과 원칙을 허무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묻는다. 경계선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정남'에게 물어보아야 할 만큼 애매하지는 않다. 결정자의 가슴 속에 민주화, 인권, 안보, 통일 같은 목표들이 살아 숨쉬고 있으면 아무리 큰 양보를 하더라도 유연성에 속하는 문제가 된다.

중대한 시기에 담론을 생산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정치학자들도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인권 유린의 현장에서 궁핍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배려한다면, 고향땅 밟아보기를 소원하는 실향민들과 두고 온 가족을 그리며 눈물짓는 탈북자들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천안함-연평도 도발로 숨져간 아들을 가슴에 묻고 울지도 못하는 어머니들을 생각한다면, 모든 것에 앞서 한 목소리로 북한의 변화부터 촉구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도 필요하지만 북한의 변화가 더 절실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북한을 향해 한 목소리로 "통영의 딸들을 돌려주고 새 출발을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핵무기를 내려놓고 함께 상생과 통일의 길로 들어서자"고 외쳐야 한다. 그것이 임진년 새 아침에 김정일 위원장이 없는 북한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정치학자들이 외쳐야 할 고함이다.